

폭염 속 날아든 ‘예비군 훈련 통지서’에 부글부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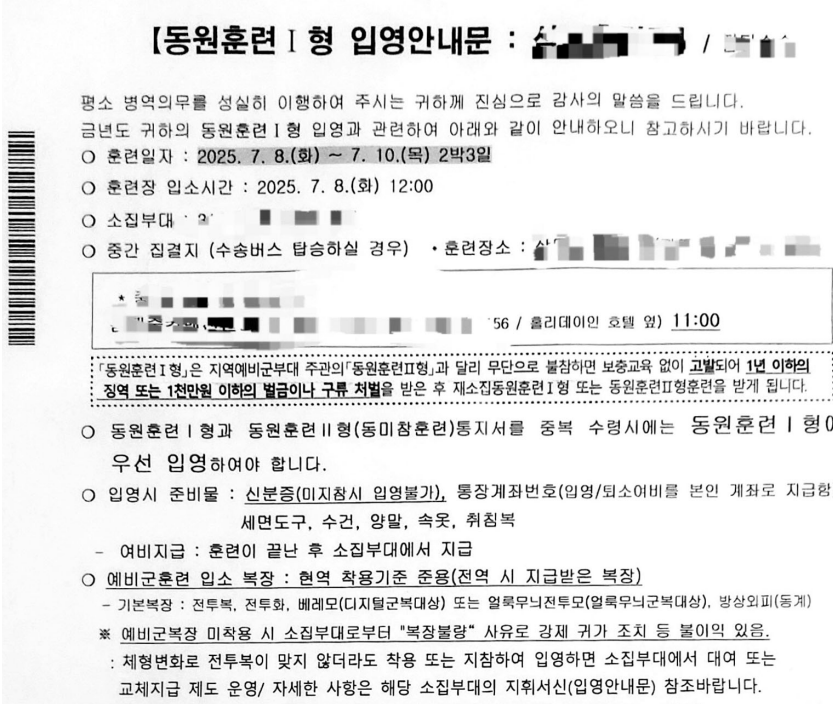
35도 웃도는 무더위 속 훈련 진행
“현역 때도 이런 날씨엔 훈련 연기”
계절학기·여름 휴가계획 차질 호소
관계당국 “예비군 건강관리에 최선”

“이런 폭염 속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하네요, 현역때도 이런 날에는 훈련이 연기됐던 것 같은데...”

광주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숨막히는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랑곳 않고 진행되는 예비군 훈련에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지방방무청 등에 따르면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예비군 동원 훈련이 실시된다. 올 여름 가뭄이 일찍 종료되고 폭염이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된 20대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예비군 4년차인 이상호(26)씨는 “현역 시절에도 날씨가 너무 더우면 훈련 등을 뒤로 미뤘던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 같 생각을 하니 참 막막하다”며 “모두들 생업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동원예비군 훈련 안내 통지서.

독자 제공

등으로 바쁜 시간을 빼서 가는 만큼 이런 더운 날씨는 피해서 동원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업을 위해 한창 중요한 시기를 보내

고 있는 장지석(26)씨도 불만을 터트렸다.

장씨는 “대학 계절학기나 자격증 공부 등 중요한 시기에 예비군 훈련을 가는 것

도 짜증나는데 이런 뜨거운 날씨에 부르니 더 화가 난다”며 “훈련 대상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잠까지 자야 하는데 이 날씨에 이견 아니지 않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무더위 속에 예비군 훈련만을 위해 뜨거운 햇빛을 뚫고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이들도 있다.

특전병으로 근무했던 백동진(23)씨는 “광주지역에 훈련받을 자리가 다 차서 어쩔 수 없이 경남까지 가서 훈련을 받았다. 이런 무더위에는 예비군들을 배려해 실내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전달되지만, 짧게는 1~2주일 전에 통보되다 보니 여름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근영(26)씨는 “예전에 여행 계획을 짰다가 갑작스레 1주일 전에 통지서가 전달됐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여행 계획 자체를 짜지 않았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건 맞으나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동원으로 지정된 훈련 대상자들은 훈련 일정을 자동으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예비군법 15조에 따라 동원 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해 훈련에 참석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대리를 받은 대상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8일 예비군 훈련소로 향해야 하는 한 시민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날씨에 총과 방탄모를 쓰고 훈련에 참여할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난다. 냉방시설이 제발 잘 작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에 따르면 재난지역 선포, 약천후, 감염병 등 특별한 상황시에는 국방부 승인 하에 훈련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며 “예비군들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nilbo.com

전남경찰 ‘생활주변 폭력행위’ 4개월간 집중 단속

생계침해형·주취·흥기 이용 범죄 등

전라남도경찰청이 생계침해형 폭력, 주취폭력, 흥기 이용 범죄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경찰은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형사팀 1개씩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생활주변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집중단속(4월~6월) 결과, 총 448명이 검거되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점·시장 등 자영업자의 영업을 침해하는 생계침해형 폭력 범죄 △주취폭력 및 흥기 사용 범죄 △대중교통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등이다.

경찰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사건을 이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초범 및 경미사범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 회부를 검토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기관과 연계해 사회복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상인회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 △보상금 지급 △제보 활성화 등 원활한 신고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 사범에 대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광주 외국인클럽서 7명 패싸움, 3명 검거

패싸움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에게 흥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청은 특수상해 및 공동폭행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시2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3명과

다툼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생일파티가 열린 외국인 전용 클럽을 찾았다가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클럽 밖에서 패싸움을 벌였고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이 흥기에 경미한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6일 오후 5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진곡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싸움에 가담한 일행 2명을 검거, 나머지 A씨 일행 1명과 상대편 외국인 3명에 대해서도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이들을 모두 검거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흥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준 기자

광주 한 초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 43명으로 늘어나

학생 18명·교사 2명 추가 증세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말 사이 의심 환자가 증가했다.

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43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4일 학생 21명과 교사 2명이 증상을 보였으나 주말 사이 학생 18명과 교사 2명이 추가로 증상을 신고했다.

이날 오후 기준 집단 식중독 의심환자가 총 43명으로 이들 중 3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역학 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인체 및 식품 등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는 2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북구와 학교 측은 추가 환자 모니터링과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여대 폭발물 없어 수색 종료

광주 한 여자대학교 내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7일 광주 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관계자가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을 받고 경찰

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피 조치시켰다.

관계 당국은 대학교 정문부터 출입을 통제한 뒤 4시간여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자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자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준 기자

경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추가 압수수색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공장 관계자 일부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며 “화재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22일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을 확보했고, 이후 임의 제출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4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입건된 공장 관계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형사 입건 여부는 현장 감식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건물 해체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달말께 감식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주소방본부 등 관계기관도 감식에 참여한다.

다만, 붕괴 우려가 있는 2공장(서쪽 공장)의 안전 문제가 감식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피해 공장장 전장 등 벽면 부위에 유해물질인 카본블랙(미세가루) 등이 붙어 있어 흘러내릴 경우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인력 투입이 어려울 경우,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비접촉 감식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위적·자연적 발화지점 훼손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수사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교통표지판 들이받고 도주

난폭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자체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

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가지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이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드리프트’ 방식의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로서 기본이 결여돼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철 기자